

이달의 초점

복지국가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기술·인구·기후 변화의 도전

기술변화와 사회적 위험

|김기태·정세정|

인구변화와 사회적 위험

|조성은·김성아|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유형과 양상:

소득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여유진|

기술·인구·기후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험

|김기태·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인구변화와 사회적 위험¹⁾

Population Changes and Social Risks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인구변화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2020년대 들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가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가구당 가구원 수는 점차 줄고 1인으로 형성된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이주민의 문제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2000년대 들어 이주민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낯섦’에 대한 문화적, 제도적 충격은 한국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인구는 정태적으로도 파악하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출생, 사망, 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적 구성물이다. 인구변화는 사회현상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구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경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인구변화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일정하지 않다. 다만 기존 연구 등을 종합하여 예상할 때에 경제적 성장은 둔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주 인구가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완충할지는 미지수다. 전반적인 인구변화의 방향은 복지국가의 재정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인구변화가 야기할 재정 충격은 사전에 예측되고 조정되지 못할 경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으로 연결되어 향후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에 장애가 될 것이다.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시점이다.

1) 이 글은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임완섭, 조성은, 김성아, 정세정, 신영규, 윤홍식, 최영준. (2024).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4장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결과물이다.

1 들어가며

인구는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집단’을 뜻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의 수’로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신윤정 외, 2021, pp. 21-22). 한 사회에서 인구는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이는 “한 인구 집단 내에서의 출생, 사망, 전입, 전출 등 인구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국내외로의 이동 결과로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구의 연령·성별 구조, 가구·가족 특성, 지역별 분포 등도 변하게 된다(한국인구학회, 2016, p. 457). 출산, 사망, 이동이라는 기본적인 인구 과정에 따라 인구의 양과 구조는 변하게 되는데, 이를 인구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주목하는 지역이나 집단의 조합에 따라 인구변화는 인구 규모 혹은 인구를 구성하는 구조를 포괄하게 된다.

인구변화를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60여 년 동안 전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인구성장률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인구의 총규모는 증가해 왔다. 반면 최근 한국은 인구성장률이 점차 감소해 2020년대 들어서는 총인구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 구조 중 가족·가구 특성은 사회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인구수는 줄어드는 반면 1인가구가 증가하여 가구의 총수는 2039년까지 증가하다가 2287만 269가구를 최고점으로 하여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인구는 규모와 구조가 계속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한 사회의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한 인구 규모와 구조에 맞추어진 경제·사회 정책은 인구변화에 발맞추어 조정되어야 하는데, 조정이 변화의 속도와 양상에 적절히 대응되지 못할 경우 정책의 정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의 정책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 역시 특정한 인구 상황에서 형성된 규범과 양식을 인구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화시키고 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한국은 인구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정책과 문화가 그 속도에 맞춰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 기술, 기후 변화가 중첩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인구변화가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변화를 개괄하고,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들의 경로를 탐색하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대응 방향 모색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인구변화와 사회·경제의 동적인 변화

가. 인구변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변화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 인구변화 자체가 사회적인 위험 요

소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는 고정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인구의 증가도, 인구의 감소도 대응이 늦어질 때 위험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인구 규모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인구가 급증하던 시대에 과도한 인구수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맬서스(Malthus, 1798)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탓에 갖가지 식량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전쟁, 기아, 질병과 같은 ‘적극적 억제(positive check)’를 통해서 조절될 것”이라고 보았다(최슬기, 2015, p. 24). 신맬서스주의자(Neo-Malthusian) 들도 인구 억제를 위해 피임, 낙태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에를리히(P. Ehrlich)는 “인구 증가를 암세포의 증식에 비유하며 마치 폭탄처럼 인구 증가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경고”하였다(Ehrlich, P. R., & Ehrlich, A. H., 1968; 2009; 최슬기, 2015, p. 24에서 재인용). 다른 한편 최근에는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가 환경생태학의 입장에서 과잉 인구를 걱정하는 시각과 연결되어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와 연결되기도 한다. 최근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런 이론적 입장이 다소 멀게 느껴진다.

그러면 반대로 인구는 늘어야 하는 것일까? 인구를 국가의 자원으로 파악하던 제국주의 시대 국가주의자 이외에는 인구 증가를 적극 지지하는 이론적 입장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여러 국가는

적절한 인구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다만 적절한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지구 전체의 관점에서는 현실점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식량 생산과 환경 관리의 기술적 수준, 이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한 지구환경적 상황에서의 ‘지구의 수용 능력(carrying capacity)’이 어느 정도일지는 중요하다. 환경생태학에서 ‘생태학적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나 ‘지구한계(planetary boundaries)’라는 개념을 통해 지구의 수용 능력을 정의하고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최슬기, 2015).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한 사회에서 가장 적절한 인구 규모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추세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과잉에 대응하는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는 줄어들고,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시 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과거의 인구 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인구 증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높였고, 이는 지구의 수용 능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맬서스의 우려와 달리 인구 증가의 속도를 뛰어넘는 식량 생산의 증가가 과학기술 발달로 실현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다. 이른바 녹색혁명을 통해 식량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세계 인구가 30억 명에 다다른 1960년 이후

201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두 배 정도 증가할 동안 식량 생산량은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 1인당 식량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Lam, 2011; 최슬기,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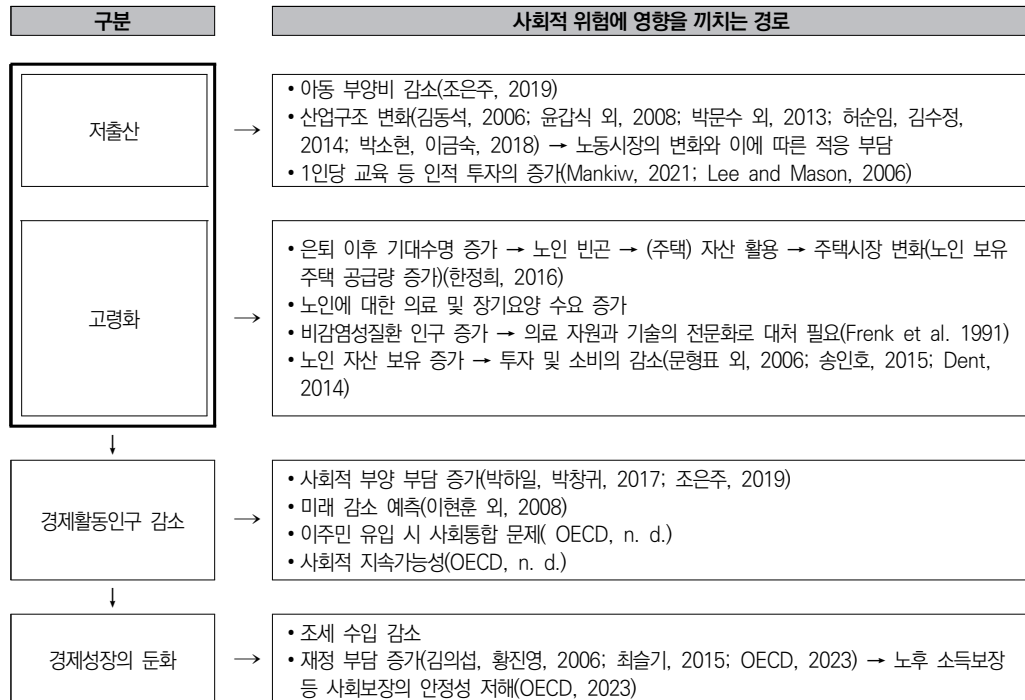
이런 점에서 인구의 양보다 구조 변화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양과 연령뿐 아니라 가족 구조의 변화도 수반한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가구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어 왔으며, 성장과정에서의 가족 경험이 달라지면서 이전보다 독립적인 개인 생활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일부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집단은 고립·은둔과 같은 부정적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독거 가구의 증가, 고독사 증가 등의 사회 현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제·사회적 변화는 국가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업자 수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조세 수입의 증가는 지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연금,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복지 지출의 수요는 증가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커져 갈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인구 변화의 영향은 여러 변수 간의 연쇄적인 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동적인 경로로 다음에서 살펴본다.

[그림 1]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출처: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김기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08, [그림 5-15].

나. 인구 변화의 동적인 경로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매개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의 경로를 큰 틀에서의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각의 경로는 기존의 사회적 위험을 강화 또는 양화시킬 수 있으며, 그 방향과 강도는 다른 요인들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인구 규모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인구의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지만,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과 총인구의 감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적정 인구를 논의한 전광희(2006), 구성열(2005), 이삼식 외(2011)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현재의 합계출산율과 그로 예산되는 전체 인구 규모는 적정 수준에서 크게 미달하

며 인구성장은 아니더라도 1.8~2.0명 정도의 합계출산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표 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의 낮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적정 수준 이하의 인구 규모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이외에 총인구 규모 감소가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구 규모의 감소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어 특정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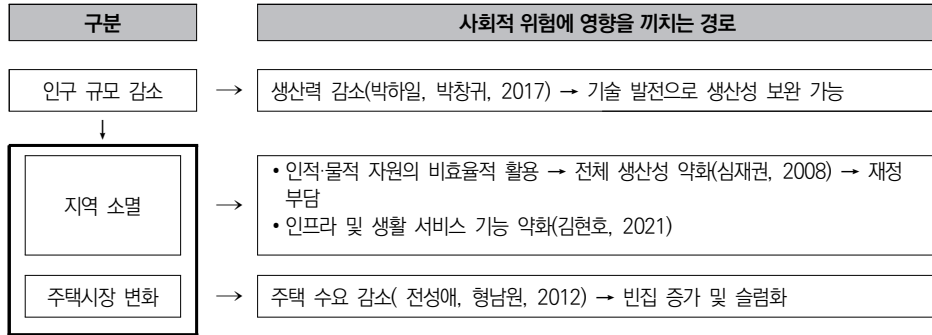
셋째, 인구 구조 중 가구 형태 변화(1인가구 증가)도 향후 사회·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3세대 사회적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인구행동으로 묶을 수 있는 혼인, 이혼, 출산, 양육 등 가족의 형성, 해체, 활동과

[표 1] 한국의 적정 인구와 합계출산율

구분	적정 인구의 정의 및 특징	적정 합계출산율
전광희 (2006)	•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구 규모 • 인구성장률 -0.03~0.15% 범위	1.9~2.0명
구성열 (2005)	• 한 사회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 위에서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후생 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 경로 •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수, 인구·경제 연관 관계 고려	1.81명
이삼식 외 (2011)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정도로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유지하고 국내적으로는 성장이 지속되고 복지 수준이 안정화될 수 있는 수준 • 2080년까지 4300만 명 수준 유지	1.8명 (2045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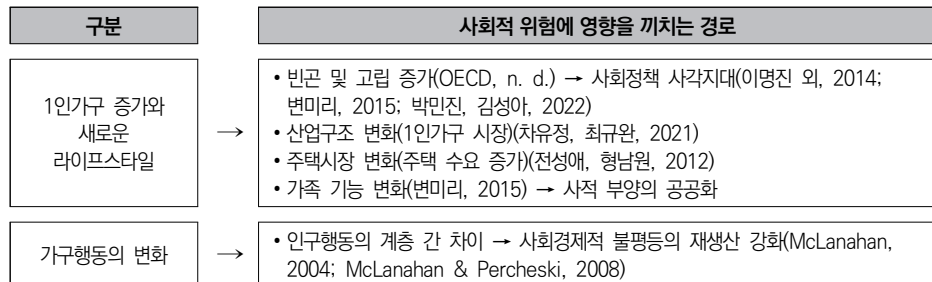
출처: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적정인구의 추계”, 전광희, 2006, 한국인구학, 29(1); “한국의 적정인구: 경제학적 관점”, 구성열, 2005, 한국인구학, 28(2);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 2011”, 이삼식 외, 201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저자가 정리함.

[그림 2] 인구 규모 감소가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출처: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김기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10. [그림 5-16].

[그림 3] 가구와 가족의 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출처: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김기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10. [그림 5-17].

상호작용 등 가족과 관련된 행동의 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생성 및 변화

앞에서 살펴본 다양 변화가 실현될 경우 인구 규

모와 인구 구조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향후 한국의 사회적 위험은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변화에 따라 사회적 위험이 생성되거나 변화하는 내용을 여섯 가지 영역, 즉 ① 빈곤 및 불평등, ② 고용, ③ 주거 및 지역, ④ 건강과 수명, ⑤ 돌봄 및 일·가정 양립, ⑥ 재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인구변화가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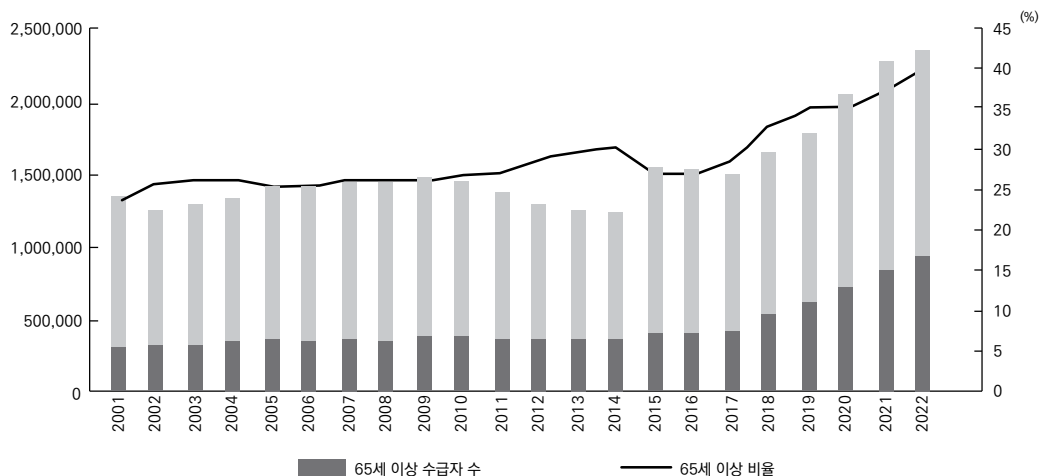
인구변화 중 총 인구 규모의 변화는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쳐 빈곤과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그 방향은 불확실한데, 경제성장에 인구 감소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 인구성장의 둔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정체 혹은 감소로 연결되어 세대 간 상승 이동의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신윤정 외, 2021). 하지만 이는 기술변화와 생산성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산업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운 고

령층 증가가 전체 인구 중 빈곤층 비중을 높일 가능성은 있다. 현재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고령자 규모가 증가할 뿐 아니라 전체 수급자 중 고령층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보면 고령층이 빈곤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연금제도의 성숙이 진행되고 있고 노인 세대의 자산 규모 등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인구와 불평등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세대 간 사회이동, 사회계층 간 인구행동의 차이로 불평등 계층 구조가 고착화 또는 심화될 가능성이 지적된다. 혼인이나 출산 등의 인구행동이 인구변동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미시적인 불평등의 증가, 계층의 재생산 등이 수반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율 저

[그림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수급자의 추세(2001~2022)



출처: “국민기초생활일반수급자수(시도별, 성별, 연령별)”, 국가통계포털. n.d.,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vw_cd=MT_ZTITLE&list_id=G_3&scrl=&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4. 10. 31. 인출한 자료로 저자 작성.

하와 동반되는 자녀수의 감소는 부모의 재산이 세대를 거듭하여 상속됨으로써 계층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Piketty(2014[2013], 2020)는 생산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인구 증가가 둔화되는 경우에는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출산율의 하락에 따른 자녀수 감소로 재산이 희석되지 않고 상속되어 세대 간 사회이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결론에 달할 수 있는, 형제자매 수와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부(-)적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있다(Choi et al., 2020). 이른바 ‘운명의 분기’ 가설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사회계층 간 인구행동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거, 이혼, 혼외출산 등 가족 형성과 관련된 비전통적 행위들은 하위 계층에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참가 및 가사노동 분담 등에서의 성역할 수렴은 상위 계층에서 더 빠르게 진행”된다(McLanahan, 2004; McLanahan & Percheski, 2008). 그 결과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마치 운명처럼 결정되는 상황(diverging destinies)으로 연결”된다. 즉 차별적 인구행동이 불평등의 세대 간 재생산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신윤정 외, 2021, p. 113).

미래 인구변화의 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주도 빈곤 및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주가 빈곤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적 환경과 이주민 구성 등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데이비스와 후턴

(Davies, Wooton, 1992)은 이주민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불평등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낮추므로 불평등을 심화하지만, 고숙련 이주노동자는 고숙련 임금 프리미엄을 낮추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이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분석 대상이 된 지역과 국가의 특수성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Guzi et al.(2021)은 2003~2017년 25개 유럽연합(EU) 국가의 이주, 경제성장, 불평등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는데, 이주가 특정 기간 동안 연구 대상인 25개 EU 국가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Kahanec, Zimmermann(2008)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숙련 이주민 유입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효과를 분석했다. 다만 Fernandes(2013)는 ‘새로운 위험의 인종화’(ethnification of new social risks)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주노동자를 제외한 다수의 이주 인구가 노동시장 편입에 실패하면서 실업과 빈곤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나. 인구변화가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인구변화가 전체 국민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는 산업·경제 구조 변화와

맞물리는 현상이다. 기술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가 고용과 소득에서는 주요 변인이 되는데, 인구변화에 따라 이 영향의 파급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인구성장의 둔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Piketty, 2014). 경제성장을 노동과 자본의 투입 결과로 파악할 때 자본이 고정적이라는 전제에서 노동력 투입의 양적 감소는 노동생산성 증가로 상쇄되지 못한다면 경제성장은 둔화된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 결과 노동력 증가율의 둔화가 성장률의 둔화에 선행되었다는 분석도 있다(신윤정 외, 2021, p. 226).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성장의 둔화, 나아가 인구 감소는 총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좋은 일자리의 감소와 국민총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인구 감소는 소득 감소로만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 감소로 이어진 역사적 사례도 있다. 14세기 초 유럽의 흑사병의 유행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연결되었다. 이는 노동력 부족과 실질소득 증가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불평등이 감소했다(Scheidel, 2017). 흑사병 유행과 같이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는 노동의 희소성을 증가시키고, 노동력 구매의 가격(임금)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력 투입의 양적 감소를 줄이기 위한 이민정책,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한 인적 역

량 강화 등이 총인구 규모와 총고용 및 소득을 결정짓는 데 주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Dustmann 외(2024)는 영국 사례에 근거해 이주민의 노동시장 유입이 미치는 영향을 이주민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근로인구 구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들의 결론은 전반적으로 이민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즉 이민이 노동 가격의 변화를 유도하여 임금 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임금근로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전혀 크지 않다. Esposito 외(2020)는 1997~2016년에 15개 유럽연합 국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민은 단기적으로는 전체 표본의 실업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주변 일부 국가에서만 실업률을 낮춘다고 분석했다. 국가별로 거시경제 기반과 노동시장 특성의 차이에 따라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 인구변화가 주거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 인구변화는 총인구 감소보다 지역 간 인구 변동의 차이, 그로 인한 일부 지역에서의 인구 소멸이 더 심각한 사회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인구 변화가 심각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지역 격차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출생 인구의 감소가 총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계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 위기

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지방소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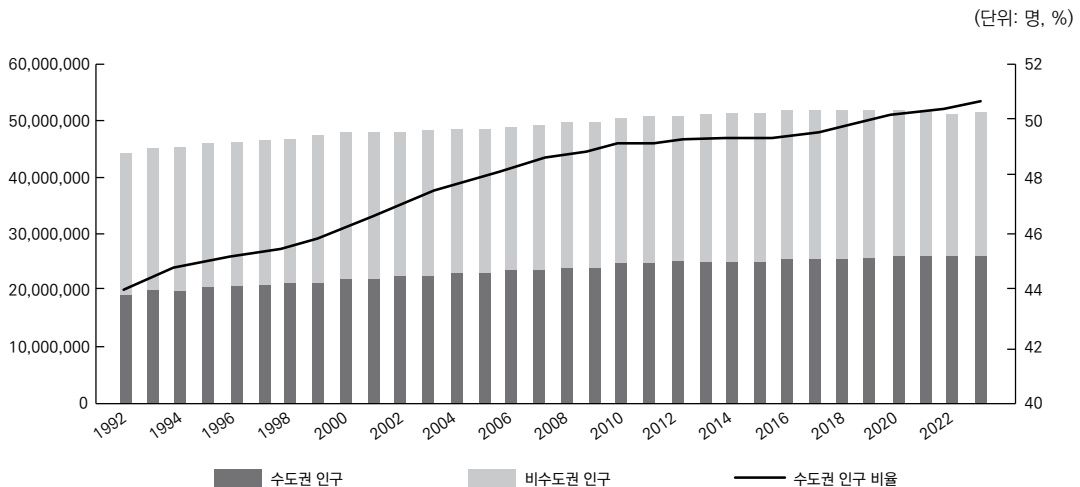
지방소멸은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측면에서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로 정의된다(김현호, 2021, p. 1). 이 용어는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보고서에서 사용하면서 널리 퍼졌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시·정·촌 중 절반인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2040년까지 소멸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増田寛也, 2014). 마스다 히로야는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일본의 경우 인구가 지나치게 도쿄로 집중하는 극점사회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인구 집중이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

키는 주범이라고 주장한다(민보경 외, 2023).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서도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심각하다. 2023년 현재 전체 인구의 50.7%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 일본 28.0%, 프랑스 18.2%, 독일 7.4% 등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 경향은 인구 감소가 가까워졌음에도 더욱 심각해져 2019년 50.0%를 넘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김현호, 2021, p. 2. 다음의 그림 5 참조).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추세는 위기 지역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인구 유출은 그 자체로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위기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젊은 인구가 더 많이 유출되

[그림 5] 수도권 인구의 집중



출처: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 n.d.,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8024&vw_cd=MT_ZTITLE&list_id=A1_13&scrl=&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4. 10. 31. 인출한 원자료로 저자 작성.

는 경향을 보이면서 인적 손실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게 된다(이상림, 최인선, 2023). 결국 지역소멸 지역의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지역 인프라에 투자할 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다시 지역 인구 유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데, 보다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다.

지역 인구의 문제가 불균등한 만큼 주거 문제 역시 한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같이 도시 외곽 지역의 빈집 증가 등과 같은 현상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추세로는 수도권 지역 밀집(전체 인구 대비 비율 증가) 형태가 예상된다.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어 비수도권의 저출생 영향이 증폭되고 있다.

이주민 유입이 주거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게토화 혹은 지역 불평등을 심화할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뤄졌다. 미국 사회의 이주민의 지역적 분리를 분석한 커틀러 외(2008)는 미국의 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1910~2000년 사이 외국인 주거 통합을 조사했다. 이민자 분리는 20세기 초반에는 감소했지만, 1970년대 이후 인종 분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시 형태의 변화, 특히 원주민 중심의 교외화와 대중교통의 쇠퇴가 새로운 이민자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됐다. 반면 프랑스의 이민자 분리를 연구한 팬 커 손과 버두

고(2015)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프랑스에서 특정 이주민으로 구성된 이민자 밀집 지역의 집중도는 2000년 들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이주민의 지역적 밀집 혹은 분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구성할지에 대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라. 인구변화가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

인구 규모나 인구 구조는 직접적으로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많은 연구에서는 수명과 건강의 변화가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다만 사망력의 전개 과정을 이론화하는 모형인 역학변천이론(Theory of Epidemiology Transition)에서는 인구변천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질병 구조를 이론화하고 있다. 이 이론들에서는 인구변화가 질병 구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구변천과 맞물린 현대화 과정이 건강 위험 요인들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된다(신윤정 외, 2021 참조). 큰 흐름에서 보면 역학 변천 이전에는 감염성 질환이 주된 사망 원인이 되며, 아동과 성인의 높은 사망률로 기대수명이 40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역학 변천이 시작되면서 감염성 질환의 중요도는 줄고 비감염성 질환이 주된 사망 원인이 되며, 기대수명은 점차 늘어나는 변화 패턴을 보인다.

요컨대 사망력과 사회 불평등의 관계에 따라 계층별로 건강과 수명에 대한 통제 정도는 다를 수 있

지만, 건강과 수명 자체가 인구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인구변화에 따라 늘어난 노년층의 질병 부담 및 의료서비스가 주요 논점이 된다.

우선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인구의 질병 부담을 증가시킨다. 특히 “미국의 경우 노쇠 유병률이 7%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은 그 2배 가까운 11.7%에 달할 정도로 허약 정도가 심한 편”으로 분석된 바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노쇠 유병률이 더 크게 높아질 수 있다(허종호, 황종남, 2023, p. 12).

노년기 건강 문제는 영양 섭취와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소득과 교육 수준 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노인에게서 만성 질환이 누적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의 삶을 만성질환의 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노년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퇴행성관

절염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윤종률, 2016; 이지원, 2017). 가장 최근의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노인의 86.1%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만성질환 1개를 지니고 있는 노인은 22.1%, 만성질환 2개는 28.0%, 만성질환이 3개 이상인 노인은 35.9%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앓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63.9%, 노인이 앓고 있는 평균 만성질환 수는 2.2개로 조사되었다(강은나 외, 2023, p. 144). 이 수치는 2020년 조사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더 나빠진 결과이다.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노인 인구의 84.0%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3개 이상 복합 만성질환자는 27.8%로 조사된 바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이주민 유입이 선주민의 건강에 미칠 가능성 혹은 경로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이뤄졌다. 그러나 이주민 유입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표 2] 역학 변천 단계의 도식

구분	변천 이전	변천 진행기	변천 후기	변천 이후
	역질과 기근의 시대	범유행 감소 시대	퇴행성 및 인조 질환의 시대	자연된 퇴행성 질환의 시대
역학 변천 측면에서 사망의 원인	감염성 질환 및 모성, 주산기, 영양 결핍 (Group I)에 의한 사망이 주	사망 원인 Group I의 중요성 감소	비감염성 질환(Group II)에 의한 사망이 주	비감염성 질환(Group II)에 의한 사망이 주
인구변천 측면에서 사망률의 변화	• 기대수명 40년 이하 • 아동과 성인의 높은 사망률	• 기대수명의 증가 • 아동 사망률의 감소	• 70년 이상의 기대수명 •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기까지 생존	• 기대수명의 증가 • 더 오랫동안 사망 지연

출처: “Changing levels and trends in mortality: The role of patterns of death by cause”, UN, 2012, p. 10(Figure II. 5)을 옮긴 신윤정 외, 2021, p. 86. [그림 3-2]를 저자 재구성.

분석은 찾기 어렵다. 이주민의 유입이 선주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다수다. 반면 이주민 당사자들의 건강 결과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를테면 Giuntella, Mazzonna(2015)는 독일 사회경제 패널(1984~2009년)의 개인별 독일 사회경제 패널(1984~2009년)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독일로 이주한 이민자들은 도착 당시에는 선주민보다 더 건강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선주민의 건강은 저학력, 블루칼라 노동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개선됐는데, 필자들은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노동 현장에서 이주민이 선주민을 대체한 결과로 분석했다.

마. 인구변화가 돌봄 및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인구 규모의 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성비 변화, 인구 분포 변화 등 인구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공급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서 사회서비스는 2000년대 중반 신사회적 위기에 대한 인식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조성은 외, 2019). 당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1~2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해체로 가족 내 돌봄 체계가 약화되었다. 근로빈곤 층 증가, 계층 양

극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서비스 정책 도입을 서두르게 된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전개와 함께 기간 비공식 가족 영역에서 돌봄 역할을 수행해 오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돌봄 기능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요구되었고, 돌봄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핵심 영역이 되었다(이재원, 2012). 사회서비스 정책이 제도화되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전자바우처 방식(노인 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사회서비스 도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은 공식 돌봄 체계의 기틀이 되었다.

그런데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사회화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의 공급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코프체인에 근거한 전이행렬과 다항로짓모형·다항프로빗모형을 활용한 이지혜의 최근 분석에서는 혼인 및 출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 구조의 변화로 시설 및 개인 양육 돌봄수요 감소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노인 돌봄 필요 규모는 고령층 인구의 규모 변화, 특히 75세 이상 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요 규모가 증가하여 돌봄 필요 규모는 2021년 고령층의 12.2%에서 2035년 23.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지혜, 2024). 이같이 돌봄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돌

봄 영역의 노동력 공급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2026년과 2031년까지의 부문·유형별 노동 공급 및 노동 수요 변화 전망 결과를 결합하여 부문·유형별 노동 부족·과잉 규모를 추정한 이철희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26년 39만 4039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1년에는 58만 2588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력 부족의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이철희, 2024).

한편 이주민 유입은 서구 사회에서 저임의 인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있다. 이를테면 Escarce & Rocco(2021)는 유럽 건강, 고령화 및 은퇴 연구(SHARE)의 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이민이 유럽 거주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개선했다고 분석했다. 이주민 유입으로 인해 노인을 돌보는 데 필요한 개인 및 가정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했다.

바. 인구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인구변화가 복지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복지재정의 압박일 것이다. 복지재정의 어려움은 이미 20세기 후반 복지국가의 주된 고민이었다. 복지 지지자들이 일종의 모델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높은 자본이동,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경제화폐 통합이 가져온 재정과 예산상의 제

약 및 정치적 조세 저항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재원 조달이 점차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고민해 왔다(Esping-Anderson et al., 2006).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이 산업 구조, 노동 공급, 저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경제성장, 재정 등 주요 경제변수가 영향을 받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출산율 증가와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 복지 비용의 부담 증가와 함께 경제성장의 둔화와 재정의 세입 기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하능식, 임성일, 2007, p. 78). 재정의 수요 측면에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재정의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노동력 감소 등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조세 부담 능력, 특히, 근로소득 납세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재정의 만성적 적자를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하능식, 임성일, 2007).

재정 수입은 산업·경제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재정 부담 능력이 증가하더라도 총재정수입 증가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재정 수입은 여러 경제·사회적 요소의 결합으로 이 연구의 주된 주제와는 거리가 있어 재정 지출 측면을 주로 논의한다.

재정 지출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총량의 변화 및 구성 부분 간 우선순위의 변경 등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Dang 외(2001)의 연구 결과를 담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재분배적 재정 지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 인구 구조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베이비붐세대가 노년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가 나타났고, 특히 노령인구의 증가는 은퇴 이후의 노후 연금, 건강 비용 등 복지 지출을 급격히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의 복지재정 부담 증가와 과도한 재정 지출의 팽창을 가져오기 때문에 복지재정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Dang et al., 2001; 김의섭, 황진영, 2006, p. 37에서 재인용). Ferris and West가 미국의 1959~1989년 재정 지출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노년층 인구 증가는 수요 측면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Ferris and West, 1996). 특히 수요 측면에서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증가는 연금, 건강 등의 지출을 증가시켜 결국 재정 지출 규모를 팽창시킨 결

과로 이어졌다.

한편 인구변천 단계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져 왔다. 고전적 인구변천 이론은 “일반적으로 사망률 감소로부터 시작되는 과정으로 고출생률과 고사망률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 사회에서 저출생률과 저사망률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 사회로 이행함”을 말한다. 이 시기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근대적·사회적 위험(구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제2의 인구변천은 1980년대에 대두된 개념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서 유럽의 인구학적·사회문화적 현상과 저출산을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집중”한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신사회적 위험)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3의 인구변천은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되는 현상으로 그 추동력은 각국의 저출산 현상과 이민에 의한 인구 유입이다. “유럽과 미국의 주류 인종·민족과는

[표 3] 인구변천의 단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변동

구분	구사회적 위험	신사회적 위험	3세대 위험
고전적 인구변천	I. ① 인구 증가에 따른 실업, 빈곤 ② 수명 증가에 따른 은퇴, 빈곤 문제 ③ 도시화에 따른 주거 문제	-	-
제2의 인구변천	-	II. ① 탈산업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과정에서 돌봄 수요 증가 ② 한부모 가정 및 근로빈곤 문제 등장	-
제3의 인구변천	-	-	III. ① 이주민의 적응과 차별의 문제 ② 고령과 외로움의 문제

출처: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김기태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13. [표 5-3].

다른 저개발국에서 오는 대규모 이민에 의해 개별 국가의 인종적·민족적 구성이 급격히 변하는 현상을 제3의 인구변천"이라고 한다. 제1의 인구변천은 전 지구적 현상으로 실증적 자료를 두고 연구자들이 합의한 것인데, 제2의 인구변천은 다소 이견이 존재하며, 제3의 인구변천은 가설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인구학회, 2016, p. 461).

이렇게 인구변천의 단계는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인구변화(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가 그만큼 사회·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4 나가며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이다. 정도와 속도가 다르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를 한국만의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동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변화는 사회 현상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기 때문에 인구변화가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경로는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인구변화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일정하지 않다. 다만 기존의 연구 등을 종합하여 예상할 때에 경제적 성장은 둔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복지국가의 재정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인구변화가 야기할 재정 충격은 사전에 예측되고 조정되지 못할 경우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으로 연결되어 향후 복지 프로그램 확대에 장애가 될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등의 중요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인구 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증가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도 복지재정의 압박은 매우 클 수 있다.

이주 문제가 한국에서 사회적 위험을 구성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유럽의 연구는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유럽과 한국의 이민 문제에 관한 맥락이 매우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곽윤경 외(2025)의 연구는 이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의 다른 점을 네 가지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간단히 보자면 첫째,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경험과 인식 자체가 다르다. 1995년까지 한국에서 이민자 비율은 02%에 불과했다(김도원, 2023). 둘째, 유입되는 이주민의 성격도 다르다. 한국의 경우 단기 체류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셋째,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도 다르다.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은 2022년 기준으로 14.8%다(OECD, 2024). OECD 평균인 21.1%에서 크게 떨어진다. 넷째, 이주민 유입이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사적, 제도적 맥락도 다르다.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팽창(enlargement)이나 대규모 난민 유입의 경험이 한국에는 없다. 따라서 이

주 문제에 대한 한국적인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변화를 종합해 사회보장 재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사회보장 목적세 도입, 소비세 인상 등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현 수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유지 정도에서 복지국가의 확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세수 도입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를 포함하여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은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은나, 김혜수, 정찬우, 김세진, 이선희, 주보혜, 황남희, 김경래, 이해정, 최경덕. (2023).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윤경, 김기태, 정세정, 강예은, 김지원. (2025).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XI): 이주민과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성열. (2005). 한국의 적정인구: 경제학적 관점. **한국 인구학**, 28(2).
- 국가기록원. (n.d.).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https://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viewPolicy.do>
- 국가인권위원회. (2019).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통계포털. (n.d.). **국민기초생활일반수급자수(시도별, 성별, 연령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vw_cd=MT_ZTITLE&list_id=G_3&scrl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 국가통계포털. (n.d.).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8024&vw_cd=MT_ZTITLE&list_id=A1_13&scrl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 국립국어원. (n.d.).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orean.go.kr/main/main.do>.
- 국회예산정책처. (2020). **사회보장정책 분석 I (총괄)**.
- 김기태, 이주미, 여유진, 임완섭, 조성은, 김성아, 정세정, 신영규, 윤홍식, 최영준. (2024).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도원. (2023). **OECD 통계를 통해 살펴본 주요국의 국제이주동향**. 한국이민정책연구원.
- 김동석. (2006). 소비구조 장기전망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28(2), 1-49.
- 김익섭, 황진영. (2006). 인구구조와 재분배적 재정지출. **경제학연구**, 54(10), 33-61.
- 김제안, 채종훈. (2003).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8(2), 203-225.
- 김창환, 김태오. (2020). 세대 불평등은 증가하였는가? 세대 내, 세대 간 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1999~2019. **한국사회학**, 54(4), 161-205.
- 김현호. (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13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문병근, 하종원. (2007).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2(3), 1-28.
- 문형표, 김동석, 윤희숙, 박창균, 이삼호, 이삼식, 방하남, 최준욱, 김주섭, 선우덕, 윤주현, 정의철. (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민보경, 김태경, 이상직, 허종호, 황종남. (2023). **미래사회 대응 정책: 인구변화와 정부 중장기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 박문수, 고대영, 구진경, 이경희. (2013). **인구 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 박민진, 김성아. (2022). 1인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과 유형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4), 127-141.
- 박소현, 이금숙. (2018). 저출산-고령사회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구연령층별 관련 의료시설 분포 예측. **대한지리학회지**, 53(3), 371-385.
- 박하일, 박창귀. (2017).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경제의 분석**, 23(2), 47-87.
- 변미리. (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51-573.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 사회보장위원회. (2020).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
- 설동훈. (2017). 한국의 이민자 수용과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문화와 정치**, 4(3), 85-122.
- 송인호. (2015). **주택시장의 추세적 요인 분석: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신윤정, 고든솔, 박소은, 안수란, 우해봉, 이다미, 이원진, 장인수, 정연, 이지혜, 임지혜, 계봉오, 윤희식, 전광희, MA Chunhua, Toru SUZUKI, Yeun-wen Ku, Cherrng-Tay Hsueh, Yue-Chune Lee, ... Stuart Gietel-Basten. (2021).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심재권. (2008). 저출산 · 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농촌과 도시지역의 산업구조변화 비교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2), 125-146.
- 윤갑식, 김홍배, 최준석. (2008).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인과관계분석. **국토계획**, 43(3), 91-98.
- 윤종률. (2016). 노인의료 관련 정책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노인의료의 특성. **HIRA 정책 동향** 10(3): 7-17.
- 이경은, 김순은. (2015).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9(2), 297-325.
-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 이상림, 최인선. (2023).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오상훈, 이상돈, 구성열, 최효진. (2011).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용, 임성일, 이창균, 서정섭. (2004). **지방재정 수요의 전망과 정책대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상직. (2023). 한국사회는 외국인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국가미래전략 Insight 76호**. 국회미래연구원.
- 이재원. (2012). 사회서비스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과제. **지방정부연구**, 15(4), 333-359.
- 이지원. (2017). 초고령사회에 따른 노인건강의료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5(4), 181-203.
- 이지혜. (2024). 인구·가구구조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수요추계. **돌봄인력 수급전망 3차 세미나** [비공개

- 자료].
- 이철희. (2024). 인구 및 산업기술 변화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 사회복지서비스업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시사점. **돌봄인력 수급전망 3차 세미나** [미공개자료].
- 이현훈, 이영련, 허현승. (2008).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경제발전연구**, 14(2), 27-51.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소개.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introduction/organizationFunction.do>
- 전광희. (2006).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적정인구의 추계. **한국인구학**, 29(1).
- 전성애, 형남원. (2012).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 변화를 고려한 주택수요의 예측. **국토계획**, 47(3), 191-208.
- 조성은, 이방현, 고경환, 김수진, 김희성, 안수란, 오옥찬, 유재언, 이아영, 임정미, 이동석, 길현중, 김조설, 양재진, 윤홍식, 이주영, 최원규, 최요한, 김재현. (2019).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은, 이상림, 강지원, 이길재, 김지선, 홍지오, 황안나, 박태양. (202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제고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조은주. (2019). 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법규범의 요청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비판. **법과 사회**, 61, 1-28.
- 차유정, 최규완. (2021).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한 1인가구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리뷰**, 12(3), 109-129.
- 최성은, 김우현. (2017). **인구고령화와 노인의료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최슬기. (2015).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인구 변동요인과 인구수/인구구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6,
- 최홍엽. (2018). 국제노동이주의 규율에 관한 최근의 논의: 전지구 이주협정의 체결을 중심으로: 전지구 이주협정의 체결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43, 247-284.
- 통계청. (2022. 5. 25.).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 (2022. 9. 5.). **2021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 (2023. 12. 1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보도자료].
- 통계청. (2024. 9. 23.).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
- 통계청. (2024. 3. 19.). **인구동향조사(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path=I2
- 통계청. (2022).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2019). **2020년 인구가동 통계**.
- 하능식, 임성일. (2007). 지역의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재정논집**, 12(1), 77-98.
- 한국인구학회. (2016). **인구대사전** (전면개정판). 통계청.
- 한정희. (2016). 인구구조와 주택가격 동아시아와 유럽 비교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64, 184-198.
- 허순임, 김수정. (2014).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요소의 기여도 분해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1(2), 9-33.
- 허중호, 황종남. (2023). **초고령 사회와 노인건강 정책 (제2장). 미래사회 대응 정책: 인구변화와 정부 중**

- 장기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 황선재, 김정석. (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한국사회학**, 47(4), 201-226.
- Aslan, A., & Altinöz, B. (2020). Ther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immigration with linear and nonlinear causality tests: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Economic Journal of Emerging Markets*, 12(1), 13-24.
- Bélanger, A., Christl, M., Conte, A., Mazza, J., & Narazani, E. (2022). Projecting the fiscal impact of immi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Fiscal Studies*, 43(4), 365-385.
- Boserup, Ester. (1981). *Population and technological change: A study of long-term trend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atsberg, B., Raaum, O., & Røed, K. (2014). Immigrants, labour market performance and social insurance. *The Economic Journal*, 124(580), F644-F683.
- Choi, S., Taiji, R., Chen, M., & Monden, C. (2020). Cohort trends in the association between sibship size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26 low-fertility countries. *Demography*, 57(3), 1035-1062.
- Cook, L. J., & Titterton, M. (2023). Mapping shifts in Russian and European welfare polities: Explaining policy responses to shared new social risks. *Social Policy and Society*, 22(2), 321-337.
- Cutler, D. M., Glaeser, E. L., & Vigdor, J. L. (2008). Is the melting pot still hot?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immigrant segreg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0(3), 478-497.
- Dang, T., P. Anton & H. Oxley. (2001). Fiscal Implications of Aging: Projections of Age-Related Spending. *OECD ECO Working Paper*, 31.
- Davies, J. B., & Wooton, I. (1992). Income inequalit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The Economic Journal*, 102(413), 789-802.
- Dent, H. S. Jr. (2014). *The Demographic Cliff: How to Survive and Prosper During the Great Deflation Ahead*. Portfolio/Penguin.
- Dritsaki, M., & Dritsaki, C. (2024). Immigration, Growth and Unemployment: Panel VAR Evidence From EU Countries. *Journal of the Knowledge Economy*, 1-36.
- Dustmann, C., Kastis, Y., & Preston, I. (2024). Inequality and immigration. *Oxford Open Economics*, 3(Supplement_1), i453-i473.
- Ehrlich, P. R., & Ehrlich, A. H. (1968). *The Population Bomb*. Sierra Club/Ballantine (1997).
- Ehrlich, P. R., & Ehrlich, A. H. (2009). The population bomb revisited. *The electronic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1(3), 63-71. p.200 Lam, 2011.
- Escarce, J. J., & Rocco, L. (2021). Effect of immigration on depression among older natives in Western Europe. *The Journal of the Economics of Ageing*, 20, 100341.
- Esping-Anderson, Gallie, D., Hemerijck, A., & Myles, J. (2006). **21세기 새로운 복지국가** (유 태균 외 역). 나남출판.
- Esposito, P., Collignon, S., & Scicchitano, S.

- (2020). The effect of immigration on unemployment in Europe: Does the core-periphery dualism matter? *Economic Modelling*, 84, 249–258.
- Fernandes, A. G. (2013). Ethnification of new social risks: programmes for preparing newly arrived immigrants for (working) life in Sweden, Denmark and Norway. In **Changing social risks and social policy responses in the Nordic welfare states** (pp. 189–219).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 Ferris, J. S. and E. G. West. (1996). Testing Theories of Real Government Size: U.S. Experience, 1959–89. *Southern Economic Journal*, 62(3), 537–566.
- Frenk, J., Bobadilla, J. U., Stern, C., Frejka, T., & Lozano, R. (1991). Elements for a theory of the health transition. *Health Transition Review*, 1(1), 21–38.
- Giuntella, O., & Mazzonna, F. (2015). Do immigrants improve the health of native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43, 140–153.
- Guzi, M., Kahanec, M., and Ulceluse, M. M. (2021). Europe's migration experience and its effects on economic inequality. *IZA Discussion Paper No. 14041*, 1–37. Bonn: IZA.
- IOM. (n.d.).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https://www.iom.int/global-compact-migration>
- Kahanec, M., Zimmermann, K. F. (2008). International Migration, Ethnicity and Economic Inequality. *IZA Working Paper No. 3450*.
- Kremer, M. (1993). Population growth and technological change: One million BC to 1990.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3), 681–716.
- KOSIS. (2024).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총부양비.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Detail.do?sessionId=fAkWU7oiaFZMFYP46AMK2X0VeT1Roga p7soDDF1jqx1CzR6vMo0wxqRNOFbulDT. STAT_WAS1_servlet_engine4
- Lam, David. 2011. “How the world survived the population bomb: Lessons from 50 years of extraordinary demographic history”. *Demography*, Vol. 48, No. 4, pp.1231~1262.
- Lee, Ronald, and Andrew Mason. (2006). *What is the demographic dividend? Finance and Development*, Vol. 43 No. 3.
- MaCurdy, T. and T. Nechyba. (2001). How Does a Community's Demographic Composition Alter Its Fiscal Burdens? In *Demographic Change and Fiscal Policy* (A. J. Auerbach & R. D. Lee,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Lanahan, S. (2004). Diverging Destinies: How Children are Faring under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Demographp*, 41(4), 607–627.
- McLanahan, S. & Percheski, C. (2008). Family Structure nad the Reproduction of Inequalit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 34, 257-276.
- Malthus, T. R. (1798).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J. Johnson.
- Mankiw, N. G. (2021). 맨큐의 경제학(9판) (김경환, 김종석, 공역). 센게이지러닝. Principles of Economics(9/e).
- Nadler, A. L., van Staaldin, B., Fernandes, D., Suari-Andreu, E., Balcioglu, Z., & van Vliet, O. (2023). *TransEuroWorkS Conceptual Framework: On the Combined Effects of the Green Transition, Digitalisation and Migration*.
- OECD. (2023). *Main Findings from the 2022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70aea928-en>.
- OECD. (2024). OECD Data Explorer: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Data set].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 OECD. (n. d.). *International Migration Database*.
- Pan Ké Shon, J. L., & Verdugo, G. (2015). Forty years of immigrant segregation in France, 1968-2007. How different is the new immigration? *Urban Studies*, 52(5), 823-840.
- Piketty, T. (2014).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역). 글항아리. (Original work published 2013)
- Piketty, T. (2020). **자본과 이데올로기** (안준범 역). 문학과지성사.
- Scheidel, W. (2017). 불평등의 역사 (조미현 역). 에코리브르.
- Simon, Julian L. (1981). *The Ultimate Resour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imon, Julian L. (1998). *The ultimate resource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e World Bank Data. (n.d.). *Population growth (annual %)*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GROW>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n.d.).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https://population.un.org/wpp/Graphs/DemographicProfiles/Line/900>
- UN. (2012). *Changing levels and trends in mortality: The role of patterns of death by cause*.
- WHO. (2021). *Mortality data base*.
- 増田 寛也. (2014). 地方消滅: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中公新書.

Population Changes and Social Risks

Cho, Sungeun

Kim, Seong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changes are a global phenomenon, a concern hardly unique to Korea. What is particularly concerning for Korea, however, is that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20s, its population has been declining. The family structure is changing, with household sizes becoming smaller and the percentage of one-person households increasing. In addition, the issue of migrants emerges as warranting attention in Korea, where, with migration flows into it having become substantial since the 2000s, considerations are needed as to whether migrants experience greater disorientation from sociocultural unfamiliarity than in other countries.

A population can be studied in a static frame, but it is a dynamic system, ever changing, constantly undergoing births, deaths, and migration. Because population changes are both the product and the cause of social phenomena, it is very difficult to establish causal pathways between population shifts and social risks. Nor is the way a given population change impacts society uniform across different social conditions. However, if past studies are any indication, ongoing population changes are likely to slow Korea's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social costs. To what extent migrant populations will mitigate this impact remains uncertain. Population changes overall are going in the direction of placing considerable financial pressure on the Korean welfare state. The fiscal impact of population changes, if not kept monitored and controlled early, could raise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potentially hindering necessary welfare expansion. Efforts must begin proactively toward restructuring welfare expenditures.